

1. 개요

- 목적 : 지자체 농어촌정책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점검 및 정착과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
- 주제 : 민관협치 추진체계에서 관-관, 민-민 협력 조직의 중요성
- 강원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조직을 중심으로
- 일시/장소 : '21. 10. 21(목), 14:00~17:30 /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
- 주최 : 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
- 주관 : 주)오르빌, 사)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
- 참석자 : 농특위(분과위원장, 분과위원, 담당팀 등) 6명, 강원도(과장, 담당 등) 2명, 평창군(군수, 기술센터소장, 농업회의소 회장, 활동가 등) 10여 명, 농어업회의소 시행지역 사업 담당자 및 활동가 10여 명, 토론자, 주관단체 관계자 등 총 40여 명 참석*

2. 행사 주요결과

- 농어업회의소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 제안 및 필요성 강조
 - (민간) 농어업회의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며, 대표성 확보를 위해 민간참여 확대와 현장 밀착형 농정활동 필요
 -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 및 필수 운영비 자체 조달 체계 마련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의 발전 모색 필요
 - (행정)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

- 고, 지자체의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협치농정 구현 의지 필요
- 농업인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농정협의회 정례화, 상 위계획 수립 시 농어업회의소 참여 의무화 등
- (제도) 민관협치의 실현, 공식적인 대의기구로서의 위상 확보,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위임을 위해 농어업 회의소 법제화 필요

3. 발제 및 토론 내용

① 토론회 취지 소개

□ 농특위 의결안건 및 핵심 점검 항목(구자인, 농특위 위원)

- 지자체 농어촌정책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7대 세부과제 및 14대 항목 점검
- 단위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로 개편
-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주체 중심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로 전환
- 칸막이 문화를 극복하고 주민 관점에서 행정의 조정과 연계협력 모색

② 발제 내용

□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(김대현,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)

- 민주성, 대표성, 전문성을 갖춘 공적 기구로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갖춘 농어민 대의기구의 필요
- 전체 농어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없고 지역, 단체, 품목별로 개별 대응하므로 협의체는 존재하나 정책 반영은 한계
- 기존 농민단체를 뛰어 넘어 조사연구·교육 분야에서 공적 기능 수행 요구
- 농업인의 실질적 농정 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와 필수 운영비의 자체 조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

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의 발전 모색 필요

-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자율성·독립성을 확보하고
법제화를 통한 협치 실현, 위상 확보, 국가 및 지자체 권한 위임 필요

2 토론 내용

[좌장] 윤석원 교수(중앙대)

[패널] 이상명 소장(평창군 농업기술센터)

이성호 부회장(거창군 농업회의소)

강마야 연구위원(충남연구원)

정연근 기자(내일신문)

강정현 위원(농특위 농어촌분과)

방도혁 서기관(농식품부 농업정책과)

□ 이상명 소장(평창군 농업기술센터)

- 기존 중간지원조직은 사업비 내에서, 사업기간만 존재하는 한계가
있으며, 추진체계 안착을 위해 인건비를 상시로 확보해 지속적인
중간지원조직 운영 필요
- 국비가 뒷받침되어야 선거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, 농업
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음

□ 이성호 부회장(거창군 농업회의소)

-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2012년에 창립되어 단체간 연대와 지역내
네트워크 구축을 꾸준히 진행하며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의
발전을 모색
- 사업에 따른 한시적 조직이 아닌 전문성·현장성을 가진 상근 활
동가 확보를 통해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의 구성 필요

□ 강마야 연구위원(충남연구원)

-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, 농민단체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농정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밝혀짐
-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제도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가 지방농정에 대한 건의나 자문을 넘어 주요 의결·심의로 위상을 확보하고, 농정심의위원 등 고정 멤버로 참여 필요
- 농어업회의소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위해 사무국의 안정화 및 재정 확보 중요

□ 정연근 기자(내일신문)

- 농촌 과소화와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중심인 읍·면에 주목해야 하며 2010년대 이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접근이 진행 중
-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, 기본조례 제정, 민간네트워크의 법인화 등이 필요

□ 강정현 위원(농특위 농어촌분과)

- 민관협치 핵심은 민-관의 동등한 위치이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지위와 역할 보장 필요
- 보편화된 농민 이익 구현 방안과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근인력 확보와 운영 필요

□ 방도혁 서기관(농식품부 농업정책과)

- 국회 심사가 예정된 농어업회의소법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에 대한 관변화, 옥상옥의 우려가 농민단체 내부에서 제기
-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*로 인하여 현 정부 임기내 법 통과를 위해서는 이견 해소가 중요

* ①관변화, ②정치세력화, ③기존 농업인단체와 차별화, ④정책과정 참여, ⑤설립 요건, ⑥농협중앙회 등 지사무소 특별회원 제외, ⑦대의원총회, ⑧임원 규정 등

<행사 주요사진>



토론회 기념사진



농특위 개회사



평창군수 환영사



취지 설명



발제



토론